

대구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이 금 태 의원)

의안 번호	450
----------	-----

발의연월일: 2023. 6. 1.

발 의 자: 이금태 · 이주한 · 김한태
백일권 의원

1. 제정이유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이 대구광역시 서구에서 사망하였을 때 그 장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이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공영장례 지원 대상, 방법,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공영장례 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공영장례 관련 업무 대행, 점검, 환수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3. 제정 조례안: 불 입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대구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이 사망하였을 때 그 장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이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의 대상자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구에서 사망한 사람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제급여 또는 장제비 지급 대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비영리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구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무연고 사망자인 경우
2.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되어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고자가 있으나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의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영장례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 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금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금전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장제급여 및 장제비가 제6조제2항의 장례 지원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내용) ① 구청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조기(弔旗) 등 장례 물품 및 시설 이용료
 2. 수의, 관, 상복, 유골함 등 일회적 장례용품
 3. 장례업체, 비영리법인·단체 등과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안치료, 운구비, 화장 비용
 5.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 의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 ② 장례 지원 금액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비용으로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 ③ 화장(火葬)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 ④ 구청장은 장례 비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장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 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담당 공무원이 신청 내용을 확인하게 하고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6조제1항제3호의 장례업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이하 “주관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업무 대행)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비영리법인·단체 등(이하 “대행자”라 한다)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점검) 구청장은 주관자가 지급받은 장례 지원 금품과 대행자가 보조받은 비용에 대하여 공영장례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구청장은 주관자 또는 대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영장례를 지원받거나 그 지원 금품 또는 보조 비용을 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 금품 또는 보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 28., 2015. 12. 29.>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28., 2023. 3.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8.>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2023. 3. 28.>

④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28.>

⑤ 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1., 2023. 3. 28.>

⑥ 시장등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8.>

[제목개정 2015. 1. 28.]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제3항에 따른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의 조성·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2015. 12. 2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 화장시설·공설 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 및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2021. 1. 12.>